

서 면 질 문 서

질 문 의 원	이석래 의원	소 속	도시산업위원회
질문 대상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질 문 요 지 및 소 관 부 서			
<p>1.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협소한 행정공간 해소방안은 ? ▷총무과</p> <p>2. 신평공단 산폐물 소각장에 대한 질의 ▷환경보호과</p> <p>3. 울속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청소행정과</p> <p>4. 다대쓰레기 소각장 부설시공에 현재 장비상태 및 앞으로의 운용계획은? ▷청소행정과</p> <p>5. 차량을 이용한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케 할 수 없는가? ▷교통행정과</p> <p>6. 주차 경고시간을 세분화 시킬수 없는지?</p> <p>7. 경직된 부산시 대중교통행정의 개선을 촉구한다. ▷교통행정과</p> <p>8.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유사시 재해예방 등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방안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p> <p>9.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의 유지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 ▷교통행정과</p>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이석래 의원	소속	도시산업위원회
질문대상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질문요지 및 소관부서

10.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노상주차장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촉구 ▷교통행정과
11.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 ▷교통행정과
12. 차량과속 감시카메라 활용효과 및 적발, 단속건수는 ? ▷교통행정과
13. 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한 전산화 실적은 ? ▷교통행정과
14. 승용차 부제운영(10부제, 무지개운동)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용의는 ? ▷교통행정과
15. 동일 차량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세 추진 용의는 ? ▷교통행정과
16. 버스 정류소 승객 대기시설 확충방안 수립계획은 ? ▷교통행정과
17. 자전거 보관대 부실 제작건과 관리부실을 묻는 질의 ▷교통행정과

따로 붙임 : 질문서 1 부. 끝.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1.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립장 사후 복원 사업계획에 의하면

가. 쓰레기 매립지역은 철새도래지로의 자연환경 복원하고

나. 중단부는 관리시설, 학습원으로 활용하며

다. 하단부는 탐방객을 위한 시설지 확보인데도 불구하고 매립후 2년이 넘게 방치,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이유?

2. 다대쓰레기 소각장부실시공에 따른 악취, 백연기 발생, 관·광판 위치 부적당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다대쓰레기 소각장 배출가스 현황에 대해 질의 하였을 때 하자가 없다는 서면답변 접수후 96년 1월 다이옥신 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허위보고 한 사유를 해명하고 현재 정비상태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운용계획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1. 신평공단 산폐물 소각장에 대한 질의

- 가. 보도에 의하면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한다는데, 재조사만으로도 영향평가는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당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게 할수 없는가?
- 나. 현 시설로는 다이옥신의 다수의 인체유해 물질의 저감효과가 의문시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다. 만일 가동에 대비해서 5년, 10년, 20년 그 뒤를 대비하여 인근주민을 대상으로한 사전 건강검진등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계획을 입안한적이 있는지?

라. 환경영향 재조사 실시후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면 향후 집행기관의 대응책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1.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협소한 행정공간 해소방안은?

40만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공간으로 일부 부서가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급한용무, 용건으로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청사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20~30분씩 入口에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 부족으로 많은 구민들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느낀다.

가. 이들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코저 신평동 산26번지 일원에 대지 9,500여평의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추진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 금후 계획은?

나. 신청사 확보전이라도 당장 불편한 민원인 주차장 확보용으로 신청사 入口 좌측편의 민간인 건물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다. 위의 방안도 어려우면 현재의 주차공간에 2~4층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계획은?

라. 현 주차공간에 주차해 있는 차량중 공무대기중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일반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마. 또한 민원인의 민원소요 시간에 따른 호출제도를 도입, 이를 전산화 시키고 용무후엔 신속히 떠나도록 하는 방안은?

바. 예산 뒷받침이 어려우면 정문 좌측건물 1동을 구입, 민원인실로 하고 전화예약민원, 직접 신청할 민원은 이곳에서 접수 처리케 하는 방안은?

사. 지금 당장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전화로 신청한 민원이나 간단한 민원은 청사 입구 경비실에서 찾아가게 하고, 접수케 하면 어떠한가?

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을 더욱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가능한한 해결토록 조치할 계획은?

도시국 업무중 교통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및 대안

1. 차량을 이용한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케 할수 없는가?

앞으로 3년후면 대망의 21세기가 온다. 차량운행의 역사는 길어 광복후 반세기를 넘어 선진된 제도를 수립할때가 늦긴 했어도 늦다고 생각할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다.

제안코자 하는 것은 현행 교통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선 차량운행자는 단속기관이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주·정차 위반대상자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에도 건의한 사실이 있지만 다시 제안하니 정부나 지자체는 차량을 갖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한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겐 구·군·읍·면·동에서 등록을 받아 도로 사용료 또는 점용료 명목의 주·정차 요금을 납부케하고, 도로여건에 따른 일정한 시간내에 주·정차를 허용케 하여(호주의 경우 10분)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또는 관계 법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세입증대 효과는 물론 준법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2. 주차 경고시간을 세분화 시킬수 없는지?

도시는 흐름이고 원만한 소통을 위해선 주차단속은 필요하다.

다만 단속에 있어서 지역적인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차별 단속으로 스티커를 40매이상 소유하고 납부를 거부, 주차 단속업무를 회롱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한다.

단속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단속하면 단속의 효과는 높일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주민과의 일정한 약속 또는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

캐나다의 예를 들어보면 요일별, 시간대별, 장소별로 세분화 시켰고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 불가능한 장소를 전주, 가로등주, 신호등주에 적,청색으로 2중으로 부착시켜, 상가, 사무실, 관청, 시장, 학교 주변 등 주민편의 쪽에 무게를 실어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 개선시킨다면 주민의 이해도 증진시킬수 있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는지?

3. 경직된 부산시 대중교통행정의 개선을 촉구한다.

가. 융통성 없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의 교통행정은 군림행정인지,

주민행정인지, 무소신 행정인지 알수 없다. 지금은 자치시대인가 아닌가?

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하고 주민에게 만족스런 공간 및 시설 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이전이라도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는 번번이 주민건의를 묵살하고 있다. 업무량이 과중하면 의사결정권을 하부기관으로 이양시키거나 내부위임이라도 시켜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한다.

나. 사하구 관내의 경우 위치 선정이 잘못된 버스정류소 이전촉구

시내와 사하구 관내엔 불합리하게 지정된 버스정류소가 하단1동 가락타운2·3단지 건너편 하구둑 入口 세양병원앞 등 다수 개소가 있다.

그중 신평1동 광로변 육교옆 버스정차장을 예로들면 1993년 7월초 육교공사를 위해 본래 위치에서 아래로 30M 임시 이전했

던 것이 '97년. 7월 현재까지 원상복귀가 되지 않고 있다. 그간 10차례 이상 건의를 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에서 답변이 없는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다.

현 정차장은 왕복4차선에 왕복 즉 상·하행선 양쪽에 정차장이 일치하고 있고 장림방향으로 진행하는 1차선에 좌회전 신호대가 있어 매우 불편하다.

장림방향 정류소를 현위치에서 40M 전후로 이전해주고 육교옆 하단행 정류소도 원상회복시켜 주었으면 한다.

(1) 하단행 육교 아래 정류소를 원위치로 옮기면

(가) 황색실선 주변에 주야 30여대의 무단주차가 없어진다.

(나) 무단주차에 의한 쓰레기투기 현상이 적어진다.

(다)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다.

(라) 접촉사고가(1개월에 10여건 발생) 없어진다.

(마) 중앙선 침범(하단행) 현상이 없어진다.

(2) 건너편 정류소를 전후 40M 옮기면

(가) 2개차선의 흐름에 원활해진다.(특히 출·퇴근)

(나) 육교밑의 무단횡단을 막아 인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4.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유사시 재해예방 등을 위한 진입로 확보

본건은 민방위, 교통안전,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관내 16개동 중 50여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최근의 사고는 당리에 이어 신평동에서 또 발생했는데 '97. 7. 15일 밤 11시 20분 신평 한성기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소방차 도착은 3분이나 무단주차차량으로 인해 도로폭 8M, 길이100M 구간을 진입하는데 무려 30분이나 소요되어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컸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마을에 인접한 작전 도로나 인구가 밀집된 대단위 아파트 진입로는 여하한 경우라도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2일 한성 인근 아파트 주민대표 10명이 구청을 향의 방문한 사실도 있지만 소방서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진입로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5.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의 유지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과속 주행차량의 속도를 사전에 감속시키고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한 번 설치되면 그뿐이다. 도색, 원형태유지, 표지명 파손시 복구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실행되지 않아 안전보행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신평1동을 예로들면 95년 3월초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6개소가 파손되었으며 그후 5월초 아스팔트 덧씌우기작업으로 원형을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오후 1시 40분에도 과속차량에 의해 5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재발된 적이 있어 교통행정과에 복구요청을 했으나 유지보수비가 없어 못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이다.

가. 유지보수비가 없어도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릴줄 아는 민본위주의 교통행정을 촉구하고
예산서에 A/S 과목설정이 필요한데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 위 지역을 포함, 사하구 전역에 파손, 변형된 곳이 몇 개소인지
확인 여부를 묻고,

다. 변형파손된 지역의 재시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바람.

**6.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노상주차장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지독감독
촉구**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소속 주차관리요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 주차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함에도 이를 역행하고 무질서를
부추키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불법 무질서 현상은 시내전역이 동일한데 신평1동 광로변을 일례로
들면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요원이 불법주차 영업을
하고있어 부조리 조장, 안전주행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주간에 무질서
하다보니 야간엔 소방, 구급차량의 입·출구까지 잠식하여 쓰레기가
난무하는 무단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이므로 주차관리원의 교육을
선행하여 해당 주차장주변의 청결유지와 무질서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7.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우리는 차량증가 대수 천만대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도 차량증가는 계속될 것이기에 주차장의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비용면이나 유사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접근이 쉽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각급학교 운동장, 공공기관 광장 등 도로에 접하여 있는 사용편리한 공공부지부터 우선 1개구에 1개소 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97. 7. 15 기준 사하구 차량등록 대수는 73,000여대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54,000대에 불과한데도 나머지 20,000여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가만히 있고 부산시에선 골치가 아파서, 건설교통부에선 무엇이 답답해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식으로 방치만 하지말고 사하구청, 부산시는 중지를 모아 예산확보 방안, 설계, 공사, 준공등 연차적 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하고 자금확보 방안으로 는 시민주 또는 구민주를 발행하여서라도 좁은 주차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

⇒ 나머지 20,000여대는 항상 불법 무단주차로 불안해 하고 있다.

8. 차량과속 감시카메라 활용효과 및 적발, 단속건수는?

하단2동사무소 아래 강변도로변에 설치된 카메라는 질주하는 차량을 안전운행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 설치시에는 과속억제를 위한 상당한 단속기능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의문이 간다.

가.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나. 단속적발 건수 및 과태료 납입현황

다. 만약 단속효과가 크다면 1대를 추가하여 양방향 모두 설치하는 것은 어떠하며 설치장소 개선건으로 신호기 주변보다는 직진으로 과속하는 곳이 바람직한데 추가 설치한다면 위치를 개선시킬 의향은?

9. 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한 전산화 실적은?

교통행정의 선진국 수준 진입을 위해 행정정보화가 시급한데 업무 전반에 걸쳐 전산화 추진실적율은 어떠한지 업무별 진척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10. 승용차 부제운영(10부제, 무지개운동)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용의는?

'97. 7. 15일은 전국 자동차운행 1천만대 돌파일이다.

차량증가율은 토끼 뿔박질인데 도로증가율은 거북이 걸음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데는 많은 투자 재원과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무려 국민 총생산의 3.6%인 14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전체 휘발유 소비의 96%가 자동차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합리한 지하철, 버스, 택시의 환승체계도 그중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둔한 도로증가율을 커버하여 교통혼잡비용을 줄임으로써 총 물류비용중 수송비 부담율을 감소시키고 휘발유의 소비율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승용차 운행을 억제시키는 방안밖엔 없다.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에서는 과거 각종 부제운행을 수차례 시행했었으며 '97. 12월 현재 부산시에서 무지개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과 대학교등 다수 공공기관에선 무지개 운동 시행에 따른 협조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질 않았는지 아직 까지 10부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무지개운동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다면 건물부설 주차장 등에 시행지침 및 스티커를 조속히 전달해야 하겠으며,

나. 자가용차량의 운행을 억제시키기 위해선 지하철, 버스, 택시등과 연계한 환승체계(특히 승객들이 짧게 걸을 수 있도록 환승 거리를 가깝게 하고 태양이나, 비를 피할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편리한 승차장) 수립을 재검토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버스 토큰은 어떤 가게에서든지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라. 부제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운행 휴일 만큼의 배려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감면, 보험금감면, 신차의 경우는 등록세 감면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이라도 시민과 국민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각종 부제운행, 무지개운동등 어떤 정책이든 시민운동으로 승화, 정착시키기 위해선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발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짚후 시행하여 참여하는 쪽이 불참하는 쪽보다 반대급부가 많도록 특단의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 의욕을 앞세우면 실패가 뒤 따르기 마련이다.

운행휴일에 알맞는 자동차 보험료 감면조치, 통행료, 공영 주차장사용료 감면, 자동차세 감면, 신차 등록 단계부터 운행 억제정책에 동참하면 등록세를 감면하는 조치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

11. 차량소유자에겐 “절약이 미덕이다”라는 인식을 주기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동일차량을 5년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세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차량의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감세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소비가 미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12. 버스정류소 승객 대기시설 확충방안 수립계획은?

13. 자전거 보관대 부실 제작건과 관리부실을 묻는 질의

현재 관내에 제작,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는 2가지 유형의 것이 있다. 1차로 제작한 것은 물론대공원 입구에 설치된 A형과 다대포 시장근처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B형이 있다.

A형은 9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모래에 묻혀 기능이 상실되어 점점이 필요하고, B형은 자전거를 세워서 보관하기가 어려운 불량품을 설치해 놓았다.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 보관대가 만들어진 사유는 무엇이며 보관대 설치완료 확인자는 누구인가? 잘못 제작된 보관대를 재정비 수선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수 없는지?